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경복궁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세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기초선거 무공천을 당론으로 한 약속을 뒤집고 정당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에 따른 'U턴'이라고는 하나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안철수 지도력 회의적

먼저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그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바다로 가자"며 무공천이라는 '외길 승부수'를 거듭 강조했다. 하루 사이에 소신을 접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무공천 회담 제의를 거절하고, 당 안팎에서조차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벼랑 끝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무공천은 안철수 새 정치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통합의 연결고리였기에 고심도 컸을 것이다. 무공천에 따른 혼란과 후보자들의 반발, 선거 필패론에 기댄 반대 여론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게다. 선거 이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생사 여부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제1 야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일관성 결여에, 뒷심 부족, 정치철학 부재라는 비판에 자유로운 손 없다. 원칙을 세웠으면 어떠한 난관과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다. 잦은 결정 번복은 언제든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당시

(黨心)과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밀어붙이다 타임을 놓친 판단도 설부르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철수(撤收)'라는 비아냥을 살지언정 그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분명 무리가 있다. 그가 거짓과 변명을 하고, 부러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자산인 새 정치와 신뢰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던 진정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문제인 민주당 후보와 안 대표가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이 폐지를 안 하는 경우까지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의 소지도 있다.

정치란 최선이 다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차선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과정이야 매끄럽지 못했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건 정치의 생리이기도 하다.

혹독한 정치현실 넘어서야

현재 안 대표는 김한길 공동대표와의 '투톱 체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당내 입지마저 좁아지는 등 적지 않은 내상(內傷)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도하려 했던 연합특도 녹취지 않게 됐다. 지난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있다.

의원들의 계산된 행동이 당 지도부와의 사전교감 속에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수

순이 아니었느냐는 얘기다. 신당 통합과정에 5 대 5 지분 약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혁공천을 포함한 '줄 세우기'라면 볼 장 다 보는 것이다. 결국 '그럴 리야'가 되더라도 그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다. 그동안 숨죽였던 친노를 포함한 비주류 강경파의 특세가 이번 약제를 기회로 더 커진 상황이다. 계파에 휘둘러 지방선거 후 존재감마저 상실될 우려도 크다.

하지만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역대 정치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일상의 다반사에 가깝다. 또 그에게는 여전히 호남이라는 버팀목이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12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철수 리더십 평가를 보더라도 '좋다'는 의견이 50.1%로 견제함을 과시했다.

이제 안 대표가 찾아야 하는 해법은 혹독한 정치현실을 넘어서는 해안과 힘이다. 큰 목표를 위해 작은 것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명분이 소중하나 실리와 조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맞다/틀리다는 상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안철수가 국민들을 걱정하되, 국민들이 안철수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비교우위의 지지를 보내는 호남 사람들의 주문이기도 하다.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정치이기 때문이다.

社說

대통령 '국정원' 사과, 이제 남원장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에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재발 시 엄히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사과는 새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그만큼 국가정보의 중추인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증거 조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그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주도한 대공수사국 처장과 과정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 2차장이 도의상 책임을 지고 낸 사표를 수리했을 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이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국가

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낸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다.

국정원은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위조·조작한 것은 물론 사건을 은폐하고 언론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정원장 등 수뇌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도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2차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남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면 이유다. 특히 국정원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정도로 급이 가 있는 상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최후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낸 사표를 수리했을 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이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국가

민사 상태 지방재정 개선 대책 서둘러야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 원이나 감소해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의 경우 27개 시·군·구 중 16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안정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올해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78곳으로 지난해(38곳)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군·구의 60%가량인 16곳이 올해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3곳이 늘어났다.

광주에서는 동구, 전남에서는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포함됐다. 특히 전남지역 군단위 지자체는 17곳 가운데 15곳(88%)이 해당됐다.

자체 세입 감소로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했다. 광주·전남은 더 심각하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고, 전남 22개 시·군은 16.7%로 전국에서 꼴찌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중앙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지방재정은 민사 경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 이양이 절실하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소비세 확대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환원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43세, 아이가 돌이며, 수입이 좋고, 멋진 사교생활을 즐기는 출아비가 결혼을 전제로 과부를 구합니다."

1910년대 말 프랑스 파리의 신문에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여러 차례 실렸다. 280여 명의 여성들이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점잖아 보이는 이 신사, 앙리 랑드뤼를 만났다. 그런데 랑드뤼와 연애를 시작한 10명의 여자들이 그 후 수년 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현근으로 바뀐 그녀들의 재산은 모두 랑드뤼의 것이 되어 있었다.

결혼사기꾼으로 드러난 그는 사건 지 몇 주만 지나면 '모든 가

사기결혼

구들을 팔아서 남쪽 마을 강베의 별장을 마련했다."고 애인들을 꼬드겼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경찰의 벽난로에서 수백 개의 사람과 짐승 뼈 조각을 찾아냈다.

1921년 11월 베르사유에서 시작된 정보 등으로 스마트114임을 개발해 월 평균 125만 건 접속이란 성과를 일궜다.

시·군간 협력사업도 활발해졌다. 해남·완도·진도 서남권 3개 시·군이 광역화장장 공동 설치로 난비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3.0 선도사업 특별보부세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는 정부 3.0 시책이 도입된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선 선도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응모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정보공개 확대와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우리 도가 실행할 과제를 정리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려 한다. 마야흐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자는 정부 3.0이 전남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09년에는 일본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를 각각 6명씩 살해한 두 여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혼상대를 찾기 위한 활동'을 즐긴 '곤카스(婚活) 살인'도 불리는 두 사건 모두 ▲40~70대의 남자들이 ▲수백, 수천만 엔의 거금을 여자에게 보낸 뒤 ▲연탄가스 중독이나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의문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척의 집에 얹혀 사는 주재에 휩쓸린 외모와 화려한 언변을 이용, 2년간 8명의 여성을

로부터 9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최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성의 감정을 농락하는 사기결혼은 특히,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충격이 더 수박에 겹친다.

일본의 주간지 '슈간 분쇼'는 곤카스 살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이 세상에 상당한 여자는 없다. 늙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자도 없다. 언변이 좋은 여자는 무조건 조심하라." 이 문장에서 여자는 남자로 바뀌어도 똑같이 통하는 이야기일 듯하다.

홍행기 경제부재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산야초 효소를 말하다

를 배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보았다.

설탕은 산야초의 부패를 방지하고 삼투작용으로 세포액을 추출해낸다. 설탕은 또한 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대사물질로 바뀐다. 이때, '발효'라고 부르는 미생물에 의한 일련의 실험 분해 과정은 여러 효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숙성시키는 2~3년간 계속 효소 활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산야초 관련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들을 검색하면 산야초 제품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효소를 보충한다고 소개한다. 심지어 효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여러 질병에 손상되어 생명이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준다.

동물학을 막론하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의 크기는 극히 작지만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정교한 운동은 우우에 비교된다. 그러하여 세포를 '소우주(Microscopic Universe)'라고 부른다.

이 소우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효소이고 생명현상들은 개

별 효소가 촉매하는 화학반응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효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효소를 크게 나누면 단백질단위로 구성된 단순효소와, 보조인자(cofactor)가 필요한 복합효소가 있다. 복합효소의 활성부위는 보조인자에 있다.

효소들은 제각기 고유한 형태를 가지는데,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서는 변형을 일으켜 활성을 잃은 '죽은 효소'가 된다. 예외적으로 소화 효소들은 pH 1~2의 강산인 사람의 위액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산야초 제품에 효소가 들어있다 해도 위를 통과하면서 활성을 잃고, 또한 위·장관을 통하여 흡수 될 수 없기 때문에 효소 보충을 기대할 수 없다.

산야초 제품에는 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비롯하여 염류소,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 섬유질 외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그중 어떤 물질들은 복합효소의 보조인자로 쓰이기 때문에 관련 효소들이 활발하게 촉매 작용을 하게 된다. 즉 산야초 제품들은 외부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복합효소가 필요로 하는 보조인자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통 의학은 약재를 오랜 시간 달여서 약성물질들을 추출해 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에 약한 물질들이 소실되는 반면 산야초 제품들은 설탕을 이용한 삼투작용으로 가열 없이 영양소와 약성 물질들을 세포로부터 추출한다. 이는 과일유리나 탄산음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음료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는 '기타발효음료'로 분류되어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산야초 발효액을 단식과 병행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암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효험을 본다'고 한다. 이는 단식효과와 함께 약초에서 나온 약리물질,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 체내 효소의 활성화, 면역력 상승 등의 복합작용으로 보인다. 결코 외부로부터의 효소 공급이나 보충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산야초 효소'나 '산야초 효소 발효액'이라 부르지 말고 '산야초 발효액'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부 3.0, 공공정보 공개 통해 국민행복 찾는다

해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유지했다.

8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정부 및 영국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국정 운영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고 이 흐름은 유럽 각국, 브라질, 필리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추세다. 미국 시카고시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지도 위에 자전거 사고율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일 필름시는 지도 위에 교통사고 빈도 및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소개해 사고율을 줄이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는 그냥 묵히는 것이지만, 공개하여 민간의 창의가 합쳐지면 큰 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 3.0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국민행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형식'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못 미치지 십상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남도는 최근 2014 안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안도군청에서 '문제 해결형 현장 실감장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 성공개회의 해법을 모색했다. 박람회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의 생생한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관협력도 이끌어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친환경 농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면서 도시사부터 현장에서 농민들과 몸을 부대끼며 실득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이제 전남이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또 '점동 농업의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산업', '나무은행', '1읍면 1목욕장',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은퇴도시'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창의적 정책도 현장 맞춤형 행정의 산물이다.

지난해엔 전라남도가 정부 3.0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도청이 관리해 온 공공정보 공

개를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325만여 건)의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곧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과 생활편의로 이어졌다.

(주)이십일 기업은 '실감하는 바다세상 DB'를 활용하여 6만여 명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과학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케이씨에스는 '남도여행길잡이 DB'의 숙박·음식점 정보 등으로 스마트114임을 개발해 월 평균 125만 건 접속이란 성과를 일궜다.

시·군간 협력사업도 활발해졌다. 해남·완도·진도 서남권 3개 시·군이 광역화장장 공동 설치로 난비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3.0 선도사업 특별보부세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는 정부 3.0 시책이 도입된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선 선도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응모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정보공개 확대와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우리 도가 실행할 과제를 정리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려 한다. 마야흐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자는 정부 3.0이 전남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